

광주시·전남도, 미래성장동력 구축…국비 확보 ‘총력전’

강기정 시장,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 건립 등 핵심 사업

김영록 지사, 재생에너지·첨단산업·국립의대 등 지역 현안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9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예산심사 핵심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며 지역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2026년 정부 예산심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광주·전남의 미래성장동력을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한정에 정책위의장,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도걸 국회의원 등을 잇따라 만나 ‘2026년도 광주시 핵심 국비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강 시장은 특히 광주를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산업의 중심이자 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한 ‘국가 NPU(신경망처리장치) 전용 컴퓨팅센터’ 건립 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주요 사업은 광주 인공지능(AI) 실증

도시 실현,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인공지능(AI) 영재학교 설립, 빛의 혁명 발원지 옛 5·18묘역 민주공원 조성, 광주 천 생태하천 복원 추진 등이다.

광주시는 지역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시민 체감도 높은 핵심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막바지까지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강 시장은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 먹거리 사업 예산을 광주에 가져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전남의 미래 산업 구조를 뒷받침할 핵심 법률·예산 사업을 집중 건의했다. 그는 “지금이 전남의 성장 비

전을 국가정책에 담아낼 골든타임”이라며 “재생에너지·해양·첨단산업 분야에서 전남이 맡을 국가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가 원내대표에게 요청한 주요 현안은 △국립 김산업진흥원 설립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2027학년도 정원 배정 △재생에너지 기반 RE100산단 조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여수 석유화학·광양 철강산업 구조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에너지·해양 분야 권한을 강화하는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 등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남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법안과

예산이 국회에서 충실히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한병도 국회 예정위원장을 만나 SOC, 산업전환, 의료·복지 인프라 등 도정 핵심 사업의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 사업은 △핵심 SOC 확충 △국립 김산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산단 구축 △전남도 5·18 기념관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전남센터 유치 △전남 갯벌생명관 건립 등이다.

또한 ‘2026 섬 방문의 해’ 추진과 관련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해 섬을 교육·생태·체험 기반의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체류형 관광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약속한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원칙에 따라 전남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주요 현안의 국가사업 반영을 위해 중앙부처·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요 법률 통과와 국비 확보를 위한 건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아부다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박수치고 있다. 왼쪽부터 알 스와이디 투자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 칼리드 왕세자,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무바달라 CEO,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연합뉴스

한-UAE ‘100년 동행’ 선언…‘바라카모델’ 원전협력 확대

이 대통령·무함마드 대통령 회담서 채택…AI·방산 협력 명시

K메디컬 클러스터 설립 논의…문화산업 ‘K시티’ 조성 계획도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명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선언문에서 한국과 UAE가 원전 협력·아크부대 파견 등으로 협력 관계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으며, 우주산업 협력을 통해서도 중요한 성과를 거둬

왔음을 재확인했다.

이울러 신뢰와 상호존중, 연대 정신을 토대로 양국의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불가역적인 수준으로 심화하기로 했다.

산업 분야별로 협력 방안도 구체화했다.

원전 산업에서는 한국이 수주한 UAE 원전인 바라카 원전의 사례가 거론됐다.

두 정상은 ‘바라카 모델’을 확장해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을 모색하기로 했

고, 이와 함께 ‘포괄적 전략 에너지 파트너십’ 아래 인공지능(AI) 기반 원전 효율 향상 및 인력양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AI(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는 AI 데이터센터 공동 설립·운영, ‘글로벌 AI 스마트 항만 프로젝트’ 등에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방 및 방산 분야의 경우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공동개발 및 현지생산 등으로 협력을 높여하기로 했다.

제약, 디지털 의료기기, 재생의료 분야 공동 연구·투자 촉진을 위한 ‘K 메디컬 클러스터’ 설립 논의 등의 보건의료 협력에도 힘쓰기로 했다.

교육·문화·인적 교류와 관련해 양국은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등으로 차세대 인재들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고, UAE를 문화·관광의 허브로 삼아 두 나라 국민의 유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UAE 내에 K 컷처, K 푸드 등 한류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는 ‘K 시티’를 조성하고 협력 사업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내년 UAE와 세네갈이 공동 주최하는 ‘UN 물 회의’를 두 나라의 물 기술·혁신 성과를 확대할 기회로 평가하고, UAE의 ‘모하메드 빈 자이드 워터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며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도시철도2호선 회차 부분 통제

남구 해태APT~봉주경로당 구간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3구구 공사로 인해 20일부턴 다음달 22일까지 남구 회차로 해태APT~봉주경로당 230m 구간의 차로가 기존 4차로에서 2~3차로로 축소된다고 밝혔다.

도로 통제는 집중 시공을 통해 교통전환 횟수를 줄이고,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는 통제기간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교통유도 인력 배치, 우회 안내표지 설치 등 교통관리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시민 정당한 정치행위 과잉대응 중단해야”

정진욱 “장동혁 대표 계엄·내란 명확한 입장 밝혔어야”

정진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갑)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18 민주묘지 참배 과정에서 항의한 광주시민을 경찰에 고소하고, 국민의힘이 ‘엄정수사’를 촉구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정 의원은 “12·3 내란 동조 정당한 국민의힘의 대표가 광주시민의 정당한 항의를 고소와 수사로 대응하는 것은 적반하장이자, ‘광주정신’을 욕보이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광주시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불법 시위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고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18 국

립민주묘지 참배에 앞서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며 “역사적 책임에 대한 아무런 담도 없이 5·18 민주영령 앞에 선 것은 광주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책임 회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시민이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는 민주사회에서 보장된 기본권이다”며 “국민의힘이 시민을 과격단체로 매도하는 행태는 5·18 정신을 훼손하고 지역사회를 갈라놓기 위한 무책임한 정치 행위”라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정작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국유세력의 왜곡·편해 문제 해결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5·18 정신 폄하 등 그동안의 행적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이 참배를 강행하는 행태는 광주시민을 무시한 정치적 의도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역시 시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범죄행위로 단정짓지 말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광주시민에게 과잉수사라는 인식을 주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진정으로 5·18 정신을 존중한다면 시민을 향한 압박성 수사 요구부터 거두고 자신의 말과 행동이 지역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 지부터 성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광주고검장에 고정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임명

첫 여성 광주고검장…내일 부임

‘대중동 사건 혐소 포기’에 반발해 사임한 송강 전 광주고검장 후임으로, 고정순(53·연수원 28기·사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9일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오는 21일이다. 여성이 광주고검장에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정순 신임 고검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 명일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9년 인천지검 검사로 첫 발을 내딛었다. 이후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법무연수원 파견), 서울고검 검사, 춘천지검 부장검사, 대전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 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강력·보



건범죄전담부 부장검사,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등 굵직한 요직을 맡았다.

2020년에는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승진해 역대 4번째 여성검사가 됐다.

검찰 주요 공판 사건을 총괄한 그는 이듬해 춘천지방법원 검찰청 검사장에 보임돼, 지역 검찰 행정과 수사 업무를 감독했다.

최근까지는 법무연수원에서 연구위원으로 후학 양성과 법률 연구에 매진했다. 뛰어난 법률 지식과 강한 현장 경험 등으로 검찰 조직 내에서 신뢰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장 등을 역임하는 등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에 앞장서기도 했다.

임명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전남, 고액·상습 체납자 627명 공개

재산압류·공매·출국금지·관허사업 제한 등 징수강화

광주시와 전남도가 19일 고액·상습 체납자 627명 명단을 공개했다.

광주시는 이날 시 누리집과 위택스에 고액·상습 체납자 28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지 1년 이상이며,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명단에는 성명·상호·나이·주소·체납액·체납요지 등이 포함되며, 법인 체납자는 대표자 이름도 함께 공개된다.

광주시는 지난 3월 지방세 321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9명 등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6개월 이상의 소멸 기간을 부여했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83명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248명(법인 117곳, 개인 131명)으로 총 103억

원을 체납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35명(법인 13곳, 개인 22명)으로 체납액은 13억원이다.

같은날 전남도도 도 누리집과 위택스에 고액·상습 체납자 34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전남도의 최종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자 263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81명이다. 지방세 체납액은 개인 129명의 42억원, 법인 134곳의 80억원 등 총 122억원이며, 행정제재·부과금 액은 개인 75명 19억원, 법인 6곳 1억원 등 20억원에 이른다.

전남도는 명단 공개에 더해 재산압류, 공매,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해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1면 ‘광주 군공항’서 계속

김영록 전남지사는 “가장 핵심인 광주시의 무안군에 대한 1조원 지원 부분은 광주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부속 사업비 일부를 국가사업(3000억원 이상)으로 매꿔 지원하기로 했다. 또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완공 이전에 무안으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대통령실의 중재로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논의가 마침내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

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반드시 전남 서남권과 무안군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 군 공항은 1949년 창설된 이후 도심 팽창 등으로 인해 이전 요구가 제기돼 왔으며, 2007년 무안국제공항이 개항하면서 무안 공항과 연계한 이전 논의가 본격화됐다.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을 전제로 민간 공항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 고 주장했고, 전남도는 민간 공항 이전은 군 공항과 별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이전을 조지 못했다. 여기에 무안군의 반대 여론도 강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다.